

- 사례발표 -
계란등급제 시범사업

대구경북양계농협 류 동 윤 상무



1. 계란등급제 추진 현황

계란을 품질과 규격에 따라 공정하게 거래시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계란등급제를 시범 사업으로 우리 대구경북양계농협 대구집하장에서 시행한지도 5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계란등급은 외관 및 투광검사, 할란검사를 실시해 4개 품질등급(1+, 1, 2, 3)으로 판정되고, 중량에 따라 5종(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구분하여 중량규격으로 매겨지며 등급 판정된 계란은 등급 판정일자, 집하장명, 생산자 이름 등을 난각에 표시하여 유통하므로 소비자에게는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좋은 계란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등급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등급란 직판으로 시행 초기 집하장 입고수 대비 등급판정란의 비율이 10%로 미미하였으나, 3월말 현재는 순수 등급비율이 50~60%에 달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란의 크기와 내부품질을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기준에 의해 등급 판정함으로써 계란 유통을 공정하게 유도하여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계란등급제 시범실시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지금까지 시행착오로 느낀 각종 현안 문제 및 개선안 등을 토대로 향후 발전방안 등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계란등급제가 전국 최초로 우리 대구경북양계농협 대구집하장 1곳만 시행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 및 판매업체 담당들의 계란등급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정부 주관으로 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개인이나 사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으로 여겨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부족(홍보 부족)등으로 등급판정란에 대한 소비 기반이 열악해 판매가 저조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현재 판매계 직원들이 판매업체의 담당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홍보하고 권유하여 판매 매장에서 부분적으로 홍보행사를 하는 등 매장 진열대에 많이 진열하고는 있으나 소비 증가 속도가 둔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계란등급제에 대하여 일부 또는 부분 홍보보다는 소비자 및 판매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공공사업으로 각인될 수 있는 홍보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둘째, 계란등급제의 품질등급(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4등급으로 구분되며, 중량규격(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이 5종으로 구분되어지는 등 구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제품란 기준으로 80여 종류로 중,소란을 제외하더라도 48여 종류임). 즉, 판매업체(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매장에 진열하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주문시 발주서에 준하기보다는 등급되어진 계란에 의하여 판매(주문)하여야 하므로 판매업체들의 욕구 불만과 판매 수량 증대에 애로가 있다. 이는, 등급제 계란의 보다 빠른 판매업체 진열이 될 수 있도록 품질등급의 단순화(예를 들어 등급란 상품, 중품, 하품)와 중량 판매에 대한 단순화(예를 들어 10구 기준 600g 이상으로 전체 g수 표시)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필요이상의 포장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0구 판란의 경우에는 수송에 필요한 대차(계란 운송도구)가 있어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한 반면, 등급란의 경우 다시 박스포장을 하여 오히려 원가만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들로부터 비싸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포장재료는 파열강도 등을 고려하여 규격 및 재료를 선정하였겠지만, 박스포장 등으로 원가만 상승시키므로 캡슐 포장란의 경우는 플라스틱 회수용 상자 사용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구 판란의 경우에는 수송에 필요한 대차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수송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발전 방안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시행과정 중 드러난 몇 가지의 문제점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살펴 보았다.

계란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소비홍보와 시범사업으로 초기단계에서 빚어지는 각종 시행착오 등에 대한 사안들의 현실적 지원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재고관리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보조와 등급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유통기한이 짧아 리콜되는 제품을 위한 손실금 보조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이며 차별화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함은 물론이거니와 계란등급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농가, 집하장(유통인), 소비자 모두가 계란등급제의 취지를 공감하고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걸맞게 정부 차원에서는 집하 농가 및 시범업체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